고 시

●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-3호

「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」 일부개정 「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」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6년 4월 15일

공정거래위원회

「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“조사가 끝날 때까지”라 함은 “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 까지”를 의미하며, “성실하게 협조”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.

- 1.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
- 2.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 등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
- 3.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
- 4. 임직원(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)이 위원회의 조사, 심의(심판정 출석 포함)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
- 5.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, 조작, 훼손, 은폐하였는지 여부

②자진신고자 등이 위원회 심의종료 이전에 위원회의 동의 없이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자진신고자 등이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알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조의2와 제11조에서 항(①) 표시를, 별지에서 호(제1호) 표시를 삭제한다.

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- ② (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감면 신청된 공동행위 사건부터 적용한다.
- 별지(신청서 서식)에서 외국정부에의 감면신청 여부 기입란과 신청 이후의 주의사항을 신설한다.

●금융위원회고시제2016-17호

「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·법인·단체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6년 4월 15일

금 융 위 원 회